

종합·해설

# 파행 거듭 국회, 예산안 또 시한 넘기나

## 野 “대포폰 국조” 與 “수용 불가” 한나라 단독강행 태세... 충돌 우려

30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상화가 난망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심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대포폰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대화의 창을 열고 접촉 중이지만 21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청와대 측의 태도가 강경해 한나라당의 협상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대포폰 국정조사·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단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류하는 한편 장내외에서 강경 투쟁에 나설 기세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내달 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또 다시 국회를 전 쟁터로 만들라는 허명이다"며 "예산 정국이 또 다시 파행을 맞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도 "여권이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대포폰·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적기한(12월2일)을 맞추기 위해 단독 심사라도 감수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조와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민간인 사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인 데다 국조나 특검을 수용할만한 새로운 상황변동이나 사유가 생긴 게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인 예결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내일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민주당이 안들어온다고 해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번 주까지 부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를 풀기 위해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22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단독 심사에 나서고 이에 민주당이 실력 저지로 맞서면서 지난 19일에 이어 또다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국회 파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선(先) 재수사, 후(後) 국정조사'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청와대의 태도가 강경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광역시·도지사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결의문 채택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4대강·무상급식 불씨 살리기

### 광역·도지사 정책협서 4대강 재조정 결의문 채택

#### 박준영 “운하는 반대” 당내 이견 불식 노력

민주당이 '대포폰' 정국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 민주당은 타 야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공조를 강화, 대포폰 정국과 함께 진행되는 예산국회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방정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광역·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친환경적 무상급식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앙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이인영 최고위원, 김진표 지방정부위원장 등이, 광역·도지사로는 송영길 시장(인천), 이시종(충북), 안희정(충남), 김안주(전북), 박준영(전남) 지사 등이 각각 참석했다.

지난 19일 민주당과 간담회를 했던 경남도에서도 정무 부지사가 함께했다. 손 대표는 "4대강 사업은 국토를 훼손하고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며 서민 복지에 쓰일 국가재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예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송 시장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으로 표출된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2조나 되는 예산을 4대강에 집중하기보다 근본적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금강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했고, 이 지사는 "충북은 도교육청과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영산강 사업에 대한 당내 이견을 불식시키는 데도 공을 들였다.

박 지사는 "당과 전남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운하 반대는 똑같다"면서 "다만 지역 현안인 강을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당과 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지혜를 짜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 결의문은 민주당 시·도지사와 경남지사가 합의한 공동 결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강기정 주장은 번지수 잘못 짚은 것”

### 김윤옥 여사 밝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20일 자신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날 한나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강 의원의 주장을 접하고 '저건 진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는 "지금 같은 세상에 그렇게 수표를 다발로 갖다 준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서 "돈을 받아서 쓰려고 했다면 재산을 뭐 하러 헐었겠느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기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 파문을 일으켰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에서도 고가 명품시계를 착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잠시 방문, G 20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장외 투쟁 할까 제3승부수 띄울까

### 손학규, 100시간 농성 후 다음 행보 관심

지난 18일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당 대표실에서 100시간 시한부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대표의 농성은 일단 22일 오후 1시30분을 기해 마무리된다. 이 때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관철되면 손 대표는 야권의 구심점으로 위상을 굳히겠지만 21일 현재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2일부터 단독으로 종합예산심사 뿐만 아니라 삼일위법 예산심사까지 가동시키며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국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손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면서 장외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과 제3의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가능한 한 외부접촉을 끊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손 대표 측 핵심인사는 21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여론을 압박하고 국민의 지지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의 강도는 단계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손 대표가 야당이 극한투쟁 방식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갖고 있어서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부 관계자들은 손 대표가 예산 심사와 장외투쟁을 병행하면서 자신이 투쟁의 선봉에 서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명숙·김원기 등 野 원로

### '민주·평화·복지포럼' 출범

야권 원로와 전직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주·평화·복지포럼'이 22일 출범한다.

포럼에는 김원기·임재철 전 국회의장,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권노갑·김근태·김상헌·신상우·이부영·

이창복·정재철 전 의원 등 야권의 내로라 하는 정치인 11명이 원로 대표로 참여한다. 여기에 야권의 전직 의원 300여명, 단체장 100여명, 광역의원 800여명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도 문을 열려왔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창립대회에선 이들 중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상임대표, 정재철·김정길·이창복 전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최인기 의원 국감 우수위원장 선정



로서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과 실현 가능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정없이 정책 국감을 모범적으로 수행토록 견인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최 위원장의 유연한 조정력 아래 정정 없는 충실한 국감을 펼쳐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인기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이어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현금'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이 재판에 연루된 것은 생애 처음인데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로 기소되면서 그동안 상당한 심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위원장으로서의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에 선정됐다.

NGO 모니터단은 최 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

# 우리밀빵 대표 브랜드 네임 공모전

전국 최대의 우리밀 생산지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로 만든 명품 빵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네임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 1) 공모 내용 : 우리밀빵 대표 브랜드 네임
- 2) 접수기간 : 2010. 11. 22(월) ~ 12. 6(월)
- 3) 참가자격 : 제한 없음(1인 1점 이상 가능)
- 4) 참가방법 : 아래의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가) 이메일 : truefisher@kwo.ac.kr
  - 나) 팩 스 : 062-950-3927

\* 응모양식

연번	대표 브랜드 네임	브랜드 네임에 대한 상세설명
1		
2		
참가자 성명		
참가자 연락처		
참가자 주소		

- 5) 상 금 : 최우수(1명) 60만원, 우수(2명) 20만원
- 6) 입상작 발표 : 2010. 12. 15(수), 개별 통지
- 7) 심사 사 : 우리밀빵 명품 브랜드화 사업단 자체 심사
- 8) 유의 사항 :
  - 가) 동일한 브랜드 네임 응모 시 선착순으로 선정함.
  - 나) 응모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의 모든 권리는 우리밀빵 명품 브랜드화 사업단에 귀속됨.
  - 다) 응모작은 타 공모전에 입상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특허권 및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상표권 분쟁 및 권리 침해사실이 없어야 하고, 저작권 등의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당선자가 책임·부담함.
  - 라) 응모 작품 수 및 수준에 따라 시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상금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당선자가 부담함.
- 9) 문의 및 접수처 : 우리밀빵 명품 브랜드화 사업단
  - 가) 문의 전화 : 062-950-3926
  - 나) 접 수 : 팩스 062-950-3927, 이메일 : truefisher@kwo.ac.kr

